혼전양상 野 당권, '호남당심'이 가른다

전체 권리당원 26만명 중 광주·전남·전북이 절반 이상

전국 대의원 비율도 30% 이상 차지…향후 흐름 촉각

호남 당원들의 선택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75%를 차지하는 권리당원(30%)과 대의원(45%)에서 호남과 호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 선출직 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권리당원(14만5836명)은 전체(26만1962명)의 5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출직 대의원(9931명) 가운데 호남 대의원(1354명)은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 2555명, 한국노총 등 정책대의원 1250명, 시도당 및 당무위 추천 대의원 927명, 직능·재외동포·대학생 대의원 800명 등을 더하면 전체 대의원은 1만5296명이며 호남 대의원의 비율은 10%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타 지역 대의원의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부터 활동해왔던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대의원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라는 것이 당 내외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호남 당심의 흐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 당심의 근저에 '호남 정치 부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권이 아닌 당권'은 호남이 쥐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충청과 수도권으로 확산된다면 당권의 무게 추가 박지원 후보 측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 당심은 지역 구도를 뛰어넘어 당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전반에 '당권-대권 분리론'이 크게 확산되는 근저에는 호남 당심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호남 당심이 단순한 지역구도를 넘어 정권 창출 경험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다면 '친노 정당'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렵고 이는 당의 분열로 이어져 정권 창출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이인영 후보 측에서는 호남 당심을 기반으로 세대교체를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문재인 후보를 놓고 고민하던 호남 당원들이 결국 '세대교체'라는 기존의 정치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호남 당심만 뒷받침 된다면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막판까지 호남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통계

지역	선출직 대의원		권리당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1,949	19.63	37,241	14.22
부산	671	6.76	1,786	0.68
대구	439	4.42	479	0.18
인천	513	5.17	5,454	2.08
광주	**363**	**3.66**	**24,828**	**9.48**
대전	279	2.81	4,345	1.66
울산	213	2.14	496	0.19
세종	33	0.33	400	0.15
경기	2,226	22.41	35,566	13.58
강원	317	3.19	4,188	1.60
충북	313	3.15	2,324	0.89
충남	405	4.08	11,944	4.56
전북	**502**	**5.05**	**60,616**	**23.14**
전남	**489**	**4.92**	**60,392**	**23.05**
경북	496	4.99	701	0.27
경남	606	6.10	5,148	1.97
제주	117	1.18	6,054	2.31
합계	9,931	100.00	261,962	100.0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부터), 박지원, 이인영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시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정국 강타

최경환 "자녀수 등 감안 근소세 개편"

野 "국민 우롱하는 감언이설" 직격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신년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신년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새누리당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더욱이 정부 보완책마저 기대수준을 밑돌자 자구책 마련에 분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껏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도 당장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야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긴급회견을 통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며 "이래놓고 당에다 주워담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합의

30일간 회기…10~13일 대정부 질문

여야는 20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다음달 2일부터 30일간 회기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선 다음달 3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시에 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또 2월26일과 3월3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으로부터 후보자 1명을 추천받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수부 장관 등 이달중 소폭 개각할 듯

박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거취도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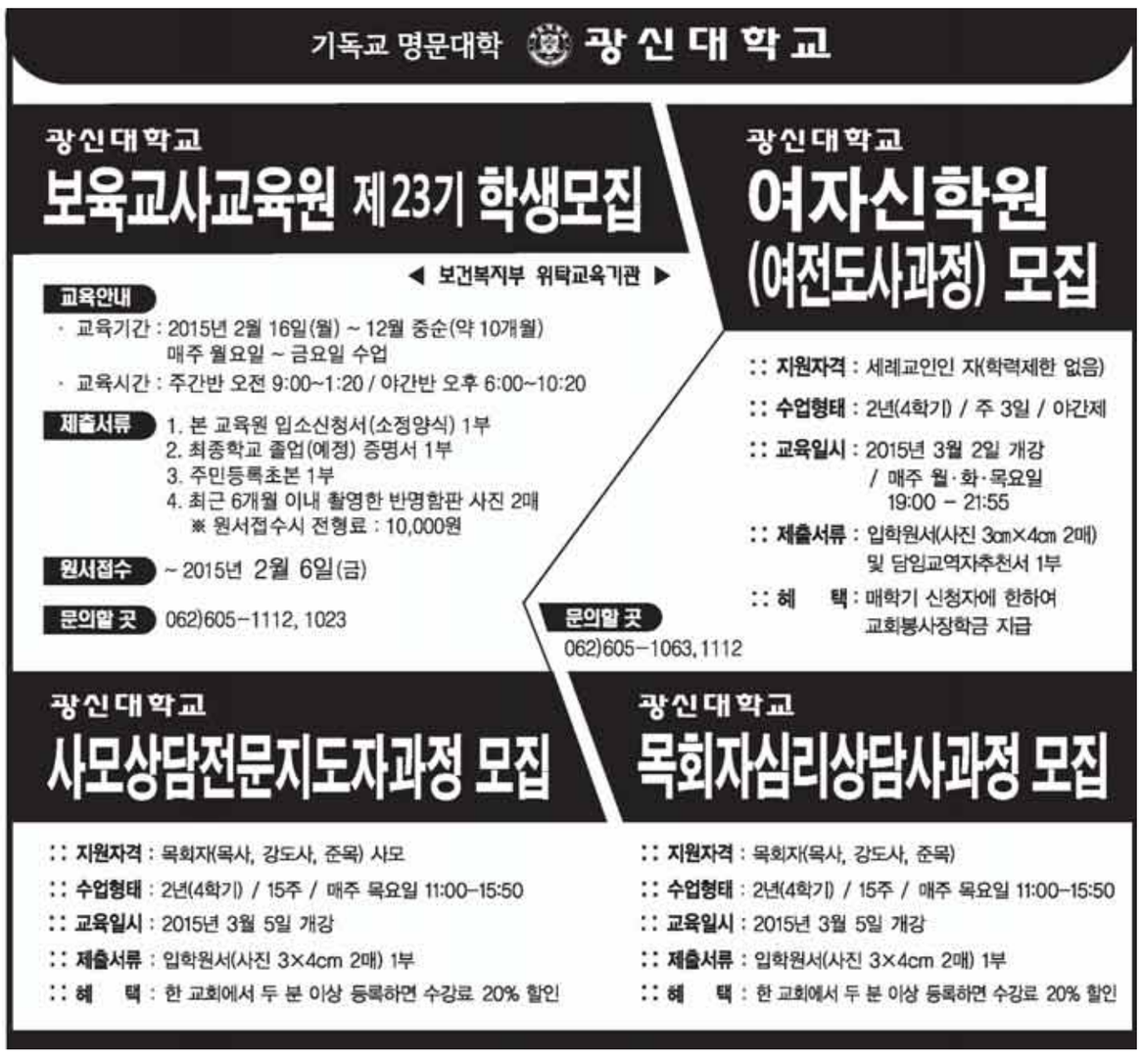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조속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 구상을 재차 밝힘에 따라 인적쇄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에 미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반에는 인적쇄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권 내 전망이다.

설 연휴 전에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을 부분적이나마 재구성, 설 이후 곧바로 도래하는 집권 2주년(2월25일)을 기점으로 새출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각의 폭은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대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와 조직개편의 폭은 꽤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정의 연속성과 청문회의 부담 등을 고려해 내각은 크게 흔들지 않는 대신 국정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에 큰 변화를 줘 집권 3년차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박 대통령은 퇴진압박을 받아온 핵심 비서 3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여론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 3인 가운데 적어도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업무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3인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들의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회의장에 와서 각료들과 티타임을 하며 담소를 나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